

시 보

선 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1726호

2019년 2월 20일 수요일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조 례

○ 인천광역시조례 제6074호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
○ 인천광역시조례 제6075호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
○ 인천광역시조례 제6076호 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8
○ 인천광역시조례 제6077호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15
○ 인천광역시조례 제6078호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 인천광역시조례 제6079호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8
○ 인천광역시조례 제6080호 인천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31
○ 인천광역시조례 제6081호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5
○ 인천광역시조례 제6082호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39
○ 인천광역시조례 제6083호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42
○ 인천광역시조례 제6084호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44
○ 인천광역시조례 제6085호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9
○ 인천광역시조례 제6086호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53
○ 인천광역시조례 제6087호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55
○ 인천광역시조례 제6088호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	62
○ 인천광역시조례 제6089호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7
○ 인천광역시조례 제6090호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69
○ 인천광역시조례 제6091호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7
○ 인천광역시조례 제6092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79
○ 인천광역시조례 제6093호 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91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규 칙

- 인천광역시규칙 제3101호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95
- 인천광역시규칙 제3102호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98
- 인천광역시규칙 제3103호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02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9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5

조 례

인천광역시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2018. 12. 18일 인천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인천광역시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함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 월정수당의 지급액 “연 4,151만원”을 다음과 같이 함(제22조 제3항)

연도	지급액
2019년	연 4,151만원
2020년	2019년 월정수당에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75%를 합산한 금액(연 4,207만원)
2021년	연 4,207만원
2022년	2021년 월정수당에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75%를 합산한 금액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2월 20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074 호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월정수당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고, 매월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

연도	지급액
2019년	연 4,151만원
2020년	2019년 월정수당에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75%를 합산한 금액(연 4,207만원)
2021년	연 4,207만원
2022년	2021년 월정수당에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75%를 합산한 금액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지방자치” 용어가 “자치분권”으로 변경되고, 자치분권 협의회법적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조문 중 “지방분권”을 “자치분권”으로 용어 정비함
(제1조 ~ 제8조, 제10조 ~ 제11조)
- 자치분권의 정의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 확대’를 추가함(제2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국가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함(제5조)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2월 20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075 호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분권”을 “인천광역시의 자치분권”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분권”을 “자치분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시의 기능”으로, “하는”을 “하고, 시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지방분권”을 각각 “자치분권”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지방분권”을 각각 “자치

분권”으로 한다.

제5조 중 “지방분권”을 “자치분권”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국가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지방분권협의회 설치)”를 “(자치분권협의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은 지방분권”을 “시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자치분권”으로, “지방분권협의회”를 “자치분권협의회”로 한다.

제7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중 “지방분권”을 각각 “자치분권”으로 한다.

제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지방분권”을 각각 “자치분권”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지방분권업무”를 “자치분권업무”로 한다.

제10조 중 “지방분권”을 “자치분권”으로 하며, “지방분권협의회”를 “자치분권협의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분권”을 “자치분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9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1. 인천광역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 제정이유

인천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개개인의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올바르게 인식함으로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및 제5조)
-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
-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규정함(제7조)
-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함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민주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및 다른 시·도, 기초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함(제15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2월 20일

인천광역시 조례 제 6076 호

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고 한다)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와 사회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건강한 정치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모든 시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평생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화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과정을 위한 프로그램(온라인·오프라인)과 민주시

민교육 기관 및 단체의 교육품질 인증에 관한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및 가치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제도에 대한 지식, 정보 및 정치 참여의 방식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정치적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육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

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관계 공무원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들의 동의로 선출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3조(이수증의 발급)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한다.

제14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군·구 및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다른 시·도, 기초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정이유

인천시에 데이터 기반 행정을 도입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과 이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규정한 것임.

☐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4조)
-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임무에 관한 사항(제6조)
- 기본계획 수립 및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제7조 및 제8조)
- 위원회 설치·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2월 20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077 호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계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통계를 말한다.
2.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된 상태의 정보로서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모든 것을 말한다.
3. “데이터기반행정”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제3조에 따른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기관 및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통계 및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직속기관·출장소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와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용하여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고 한다)의 행복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데이터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진체계

제6조(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① 시장은 통계 및 데이터와 관련한 정책·사업 등을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을 둔다.

②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
2.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3.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4. 데이터기반행정 시책 발굴 및 사업별 사전협의·조정·지원 등 총괄 사무

제7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데이터기반행정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점검에 관한 사항
3.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며,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 관계 공무원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 전문가, 교수 등 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논의사항 중 정부 공모사업 대응, 위원회 참여 기관 간 협력 사업 추진 등 특정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의 일부로 구성하되, 위원이 아닌 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 ⑤ 위원은 제4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제3장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반 구축

제13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시장은 데이터를 수집·활용·분석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들에게 수집된 데이터의 공개 및 분석결과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데이터의 수집·관리) ①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의 자료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소통 및 협력) ① 시장은 데이터 및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등을 시민에게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데이터를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데이터의 분석, 데이터 관련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연구원, 인천광역시 소재 대학,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제16조 (주요 추진 분야)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추진 분야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경제적·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특정 계층·지역·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제17조(통계의 개발) ① 시장은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 자원으로써 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계를 개발·작성·보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사회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
2. 관광·의료·교통·교육 분야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
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6.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9조(주요 정책에 대한 데이터 분석의 의무화) 시의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이 제16조에 예시된 분야의 정책을 도입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정책의 추진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데이터를 통한 정책의 집행과 평가 도입 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1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법인에 대하여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용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민간위탁 사무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재위탁 및 재계약 시 의회 동의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민간위탁 행정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재위탁과 재계약을 구분하여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함(제2조 제4호 및 제5호)
-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함(제4조의2)
- 민간위탁의 의회 동의 및 보고 조문을 세분화 하여 재위탁 및 재계약에 대한 의회 동의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하게 하는 등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제4조의3)
- 별지 서식을 신설하여 동의안의 작성내용을 구체화 함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2월 20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078 호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에 위탁하거나”를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3(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3. 기타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후단 중 “동조례 제4조제3항”을 “동조례 제4조의3”으로 한다.

[별지 서식]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가.

나. 이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며, 이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해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 개요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
- 「○○○○○ ○○○○ ○○○○ 조례」 제○○조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라. 민간위탁 주요내용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년
- 수탁기관 선정방식 :
- 위탁업무 :
- 소요예산 : 연간 ○○백만원
- 산출근거 :

3. 참고사항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관계법령

다. 그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인천광역시 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제안의 개선·보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조례의 목적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명 변경 (제명)
- 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의2 신설)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2월 20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079 호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을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제안의 개선·보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 또는 자문단에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 등에게는 제7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인천광역시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 제정이유

전기금융통신사기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의 목적 정의 등을 규정함 (제1조 및 제2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과 금융회사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및 제4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함(제5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의 범위와 사업비의 보조 대상을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2월 20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080 호

인천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관련기관”이란 인천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인천지원, 인천광역시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지역 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작성·공유 및 전파
2. 피해 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
3. 피해 예방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인천광역시 자치구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수탁자를 상위법인 「근로복지기본법」에 맞게 정비하고, 근로자문화센터의 시설 대관시 사용료를 유료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유사 목적의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근로자문화센터의 사용료 규정 신설(제4조의2)
-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수탁자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제7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2월 20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081 호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 근로자들의”를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및 제28조에 따라 근로자들의”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사용료) ① 시장은 근로자문화센터 내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은 근로자를 위한 행사 및 그 밖에 공익을 위한 시설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선납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근로자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반환

나. 사용예정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에 취소하는 경우 : 90퍼센트 반환

제7조 중 “민간 또는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 또는 비영리단체”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근로자문화센터 시설 사용료(제4조의2 관련)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구 분	기 준	사용료		비 고
		평일	휴일	
강의실	1회 (1시간)	10,000	평일요금의 20% 가산	○ 평일 : 월 ~ 금 ○ 휴일 : 토, 일(공휴일 포함)
기타 (냉·난방)	1회 (1시간)	10,000	10,000	○ 매시간 초과시마다 20% 가산 ○ 야간대관은 평일의 20%, 휴일의 30% 가산

※ 주간 : 9:00~18:00, 야간 : 18:00~22:00

인천광역시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인천의 청년이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 발생 시 현실적인 보장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당연직위원의 구성 범위를 수정함(제9조제4항)
- 청년의 생활안정과 의료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15조제3항)
- 청년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19조제3항)
- 청년네트워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22조)
-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근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23조)
-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제24조)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2019년 2월 20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082 호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기획, 재정, 보건복지, 여성가족, 문화관광, 도시계획, 건설교통, 일자리경제”를 “경제·주택·복지·문화”로 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청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청년네트워크) ① 시장은 시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보장 하고 청

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네트워 크를 둘 수 있다.

② 청년네트워크 위원에게는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청년창업 경진대회의 제도적 근거 마련과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우리시 청년 창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통해 청년실업률의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근거를 마련함(제5조의1)
-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함(제13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2월 20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083 호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① 시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사업가(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를 선발하는 청년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및 특례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특례보증) 시장은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기본원칙에 보편적 에너지복지 실현을 명시하여 이를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에너지위원회의 구성과 에너지전문기관의 설립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본원칙에 에너지복지의 실현 신설함(제3조)
- 인천광역시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함(제13조의2)
- 공유재산 임대 규정 중 대부료를 산정함에 있어 단서 규정을 신설함(제22조의2)
- 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명시함(제22조의3)
- 에너지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22조의4)
- 에너지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22조의5)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2월 20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084 호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에너지복지의 실현

제5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시민이 에너지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장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공무원, 인천광역시 의회 의원, 에너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하는 위원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에너지정책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에너지정책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이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공공기관이 공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입

제20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에 노력

제22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

7. 에너지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지원

제22조의2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옥상 이외의 장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

을 기준으로 시장이 매년 산정하여 공고한다.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 등) 시장은 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에너지 기술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2.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에 대한 지원
3. 에너지 기술·제품·서비스 관련 연구소, 기업 등의 유치
4. 에너지 기술의 연구개발, 에너지 정책의 개발 및 시행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5. 기타 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제22조의4(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① 시장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 및 기본권이 제한된 계층이나 지역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연료비 지원
2. 에너지 요금 할인
3. 에너지 시설 효율개선
4. 에너지 시설 보급

②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22조의5(에너지센터 설립 등) ①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에너지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지원
2.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보급사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3.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활용
4.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
5. 에너지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6.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7. 에너지 교육·홍보지원 및 관리
8.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여 필요한 사업

-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시 출연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센터의 조직·인력·예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자 중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를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대상자로 정함(별표 3)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2월 20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085 호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사용료 감면 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장사시설

감면 금액	대 상	범 위
전액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망자	관내주민 관외주민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사용기간 연장은 제외

2. 화장시설

감면 금액	대 상	범 위
전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관내주민 관외주민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관내주민
50퍼센트	-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자	관내주민

※ 국가보훈관계법령의 희생·공헌자 범위는 다음과 같다

법 률 명	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순국선열, 애국지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3. 화장시설을 제외한 장사시설

감면 금액	대 상	범 위
50퍼센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관내주민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관내주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관외주민

※ 사용기간 연장은 감면 제외

4. 인천가족공원 안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 및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안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감면(보상분묘는 제외)

가. 화장시설 : 면제

나. 봉안시설 : 30퍼센트 감면

다. 자연장지 : 50퍼센트 감면

5. 인천가족공원 안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부부합골 안치하는 경우: 1기만 징수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사문화홍보관에 부속된 시설물의 사용료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

인천광역시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법률 제14532호, 2017. 1. 17. 일부개정, 2018.1. 18.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 (제2조)
- 환경개선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의 대상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정비 (제2조의2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2월 20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086 호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한국환경공단법」”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국환경공단”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정이유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불법운행 등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마련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사업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를 정함(제1조 및 제2조)
-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신고 및 지급절차를 정함(제3조 및 제4조)
- 신고포상금 지급제외 및 환수 대상을 정함(제5조 및 제6조)
- 신고인의 보호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 및 제8조)
-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함(별표)
-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서식 마련(별지 서식)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2월 20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087 호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 등록,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와 불법운행 자동차를 근절하여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개월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2.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4.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5.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6. 법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자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2조 각 호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신고자가 신고한 위반행위 건별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신고자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은 한 달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한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신고 및 포상금 지급절차) ① 제2조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그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신고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④ 신고포상금은 신고자 명의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2.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3.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경찰공무원 및 자동차관리사업조합의 관계자가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5. 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소유자가 신고를 한 경우
6. 그 밖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제6조(신고포상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제5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제7조(신고인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신고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권한의 위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
2. 제4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사실 확인,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 결정 및 통지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3조 관련)

위반행위별	포상금액(원)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100,000
2.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100,000
3.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100,000
4.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200,000
5.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200,000
6. 법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자	200,000

[별지 서식]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 고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이 메 일	
	주 소			
	금융기관·채신관서 (계좌번호)			
피신고자	상 호(법인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자동차등록번호	
	소 재 지			
신고내용	자 동 차 정 보	발견장소 및 일시		
		기타 (차종, 색상 등)		
	신 고 내 용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기 타 증 빙			
처리결과 수령방법		<input type="checkbox"/> 서면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 및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4조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 : 위반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사진·동영상 등)

인천광역시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

☐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의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과 도서 자원 및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여 도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고 싶고, 가고 싶은 섬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제2조)
- 도서 발전의 추진을 위한 도서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
(제5조)
- 도서 발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도서 발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도서 발전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기준을 정함(제10조)
- 도서 발전 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제11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2월 20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088 호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서 발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를 말한다.
2. “도서 발전”이란 섬의 생태·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소득 창출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섬의 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섬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부대행사(전시 및 체험 등)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서 발전관련 계획이나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 마다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자원 규모, 투자계획 및 조달방안
4.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도서 발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도서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서 발전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3.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4.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

1. 도서 발전 업무 관련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2. 자연·생태, 역사·문화, 관광, 해양·수산, 경관, 산림·조경 등 섬 관련 전문가
3.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민의 신망이 있는 사람
5. 시의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는 도서 발전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섬 마을의 자립기반 마련 등 도서발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도서발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역량강화
2. 주민역량강화
3. 섬 기초자료 조사 및 관리
4. 사업 지원
5. 네트워크 및 교류·협력 등

6. 그 밖에 도서 발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산하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또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보조금) 시장은 도서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도서 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군·구와 공무원, 섬 마을, 민간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보도구역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횡단차도의 폭을 확대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고 보도의 훼손을 방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종전의 출·입구 분리 설치 시의 횡단차도 폭 규정을 삭제, 횡단차도 폭 규정 단일화(1개소 기준 통일) 추진하여 안전한 차량운행 및 보행자 안전을 도모함(별표)

인천광역시의회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2월 20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089 호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평면도 중 “가. 차도폭에 따른 가각규정표시”를 “차도폭에 따른 가각규정표시”로 하고, 나목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정이유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건설공사에 건설기술을 활용·촉진하여 건설기술선진화 및 품질향상, 영세한 신기술개발자의 기술 개발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사용 용어,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적용범위를 정함(제1조, 제2조, 제3조)
-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기능을 정함(제4조 및 제5조)
-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준용규정, 심의·자문사항의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함(제7조 및 제8조, 제9조)
-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의 설계반영의무와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0조 및 제11조, 제12조)
- 건설신기술에 대한 실명제 및 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 자료 축적 및 활용 사항을 정함(제12조 및 제13조, 제14조)
- 우수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선정 및 포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15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2월 20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090 호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관급공사의 품질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내에 있는 기술을 말한다.
2. "신기술개발자"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건설신기술을 개발한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
3. "관급공사"란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2조제3항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4.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5. "발주청"이란 관급공사를 발주한 기관을 말한다.
6. "생애주기비용"이란 시설물의 건설, 사용, 유지관리, 폐기, 처분 등에 이르는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총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관급공사
2. 군·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을 받는 사업

제4조(위원회의 설치)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으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공종별 신기술 적용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발주청이 이를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적정 여부
2.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
3.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제2항제2호 각 목의 신기술을 포함한다)
4. 신기술 등의 사전성능검증 필요 여부
5. 신기술 적용 건설공사의 신기술분야 분리발주 등 계약방법 적정 여부
6.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실시 여부
7.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발주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건설공사에 적용하고자 하는 아래

각 목의 기술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환경신기술

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마. 「특허법」에 따른 국내특허 중 건설관련 기술을 받은 것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3.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③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대상에서 제
외한다.

제6조(심의·자문 요청) ① 발주청은 제5조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
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5조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신기술 선정 심의 의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관계 서류와 별도로 설계에 적용 가
능하다고 판단하는 신기술 후보군(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을 선
정하여 선정사유와 함께 제출한다.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
원장은 시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2. 건설 관련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건설 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임원
4.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에 있는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7. 설계경제성 검토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의 최고 자격이 있는 자
8. 그 밖에 건설공사의 신기술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과 제1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회의에 있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안에서 해당분야 전문가 1명을 위원으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회의 및 회의록, 비밀유지, 결과처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수당 등은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심의·자문사항의 사후관리) 제6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의

결과를 통지 받은 발주청은 그 결과를 건설공사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설계반영의무) ① 시장은 건설신기술 등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급공사·주요 민간 건설현장에서 지역 건설신기술 등이 선정 및 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고,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현장 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그 신기술을 다른 공법으로 설계변경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 ① 발주청은 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적용된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 정하는 한도 내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특성상 일반경쟁이 비효율적이거나 경쟁에 부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신기술 단일부문 적용금액이 전체 공사비의 50% 이상인 경우로서 하자 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어 분리발주가 효율적인 경우

② 발주청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에

대해 보장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도로 명시할 수 있다.

제12조(실명제) 시장은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는 사후평가를 위해 시공자로 하여금 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표찰을 부착하여 신기술 명칭 또는 번호, 신기술개발자, 시공자, 시공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준공보고서, 준공도면 등에 별도 설명·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 제6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발주청은 신기술개발자로부터 해당 신기술의 생애주기비용평가서를 제출받아 이를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생애주기비용평가서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제14조(자료축적 및 활용)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유용한 자료를 축적하여 위원회 위원과 건설관련 관계공무원 등의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1. 해당 신기술의 개요 및 품셈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 결과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유익한 정보

제15조(포상) ① 시장은 우수한 신기술개발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예산절감 등 활용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 또는 기관·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조례 제5984호, 2018. 10. 8. 공포·시행)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관한 일부 조항 정비(제5조의2제1호 삭제)
-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위원장 변경(제11조제2항)
 - 행정부시장 →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2월 20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091 호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균형발전정부부시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용적률 완화 기준 등을 정비하는 한편, 중심지 및 일반미관지구가 시가지경관지구로 통·폐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 준공업지역의 오피스텔 등 준주택과 경제자유구역과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준주택과 주거복합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 기준을 정비하는 등 기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용적률 완화 및 집단화 유도 기준 등을 정비(제15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제65조제8항 및 별표 4)
-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한 용어 정의를 마련하고,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과 관련하여 반복되는 표기를 정비(제37조제1항제1호, 제38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
-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 건축제한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 단독주택·공동주택과 준주택의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해당 용도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정비(제43조제1호, 제64조제1항제13호 및 제65조제1항제13호, 제64조제17항 및 제65조제15

항 신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심지미관지구와 일반미관지구가 시가지경관지구로 통·폐합됨에 따라 건축제한 기준 등을 정비(제52조제1항제4호, 제52조제3항 및 제53조제5항 신설)
-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 일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준주거지역 및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기준을 정비(제65조제4항 및 별표 2)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는 기준에서 준주택 및 주거복합건축물은 제외(제65조의2 및 제65조의3)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2월 20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092 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을 말한다.
- ② 영 제43조제3항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제15조제3항제9호(중전의 제15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별표 8 제1호나목의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주거복합건축물”이라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가. 연립 및 다세대주택(군수·구청장이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나. 아파트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
 - 2)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 시 일단의 단지를 형성하는 것이 토지
이용에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인접한 연립·다세대·단독주
택을 포함하는 경우(해당 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야 한다)
 - 3) 일단의 단지로 구획할 수 있는 기존 연립·다세대·단독주택
지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또
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구역
안에 공장부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기존 공장부지 비율을 유
지하여야 한다)

제52조의 제목 “(건축제한 등)”을 “(경관지구의 건축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가지경관지구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다만, 공업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다만, 공업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다만,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사목·차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으로부터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 조경 등 충분한 경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로서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53조의 제목 “(건폐율 등)”을 “(경관지구의 건폐율 및 건축선 후퇴 부분의 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건축선이 지정된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 부분에 공작물(가설건축물 포함)·담장·계단·주차장·화단 및 그 밖에 경관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차량의 진·출입 등을 금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블라드·돌의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
2. 조경을 위해 식재하는 수목
3. 허가권자가 보행자의 편익 또는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공간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물
4.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지하보도와 도시철도의 출입구 및 환기구 등의 시설물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도지역안에서의”를 “용도지역 안에서의”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⑰ 제1항제13호에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에서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준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준주택을 포함한다)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60퍼센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50퍼센트
3.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 50퍼센트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용도별 연면적 및 건폐율(제1항제13호, 이 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건폐율을 말한다)을 가중평균한 건폐율 값
 가. 기숙사와 복합된 기숙사 이외의 공동주택 또는 준주택
 나. 공장과 복합된 공동주택 또는 준주택

제65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의 용적률은 별표 2에 따른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1.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2. 영 제85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말한다.

⑮ 제1항제13호에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의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준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준주택을 포함한다)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준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300퍼센트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4조제17항제4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각 용도별 연면적 및 용적률(제1항제13호 및 이 항 제1호에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을 가중평균한 용적률 값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의2(경제자유구역의 용적률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제64조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제65조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50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2. 제64조제17항 및 제65조제15항에 따른 준공업지역의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준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준주택을 포함한다)
3. 제65조제4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과 준주택

제65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 및 준주택(주택 및 준주택 외의 용도와 복합된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와 다른 법령 및 이 조례의 다른 규정에 따른 용적률 완화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1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53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2019년 4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제64조, 제65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15항, 제65조의2, 제65조의3 및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주택법」 및 「건축법」 등에 따라 승인·허가·신고 등을 신청(「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17항, 제65조제4항·제8항·제15항, 제65조의2, 제65조의3 및 별표 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미관지구에서 2019년 4월 19일 전에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신고·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받은 경우(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거나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5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53조제5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신고 또는 허가를 신청하거나 받은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 및 준주택의 용적률 (제65조제4항 관련)

1. 공동주택 및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공동주택 및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나.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준주택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기숙사는 공동주택 및 준주택에서 제외한다.

2.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제65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 및 중심·일반·근린상업 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연면적 비율은 8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도시재생 사업에 따른 주거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연면적 비율은 9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나.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은 해당 건축물 연면적 중 공동주택 및 준주택 연면적(공동주택 및 준주택 부분의 부대시설 면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비율에 따라 제4호의 용적률을 차등 적용한다.

다. 나목에 따라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경우, 공동주택 및 준주택의 연면적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준주택 중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은 해당 연면적의 2분의 1을 준주택 연면적으로 한다.

2)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외의 준주택은 해당 연면적 전부를 공동주택 또는 준주택 연면적으로 한다.

3) 공동주택 및 준주택 연면적은 1) 및 2)에 따라 산정한 공동주택과 준주택의 연면적을 합산한 연면적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산정한 공동주택과 준주택의 합산 연면적이 주거복합건축물 연면적의 9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최저 용적률(공동주택 및 준주택 연면적 비율란의 80퍼센트 이상 ~ 90퍼센트 미만 용적률. 이하 “제4호최저용적률”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3. 준주택의 용적률

제65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 및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에서 준주택의 용적률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 및 노인복지주택(공동주택 이외의 다른 용도와 복합된 다중생활시설 및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다): 제4호최저용적률

나. 준주택 중 오피스텔(공동주택 이외의 다른 용도와 복합된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제4호의 용적률을 차등 적용한다. 이 경우 제2호다목1)에 따라 해당 오피스텔 연면적의 2분의 1을 준주택 연면적으로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공장과 준주택(오피스텔에 한한다)이 복합된 건축물의 용적률: 제4호최저용적률

라. 유통상업지역에서 준주택의 용적률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근린상업지역란의 용적률을 유통상업지역 용적률로 본다.

4. 주거복합건축물 및 준주택의 용적률

공동주택 및 준주택 연면적 비율(%)	주거복합건축물 및 준주택의 용적률(% 이하)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10 미만	500	1,300	1,000	700
10 이상 ~ 20 미만	480	1,250	950	650
20 이상 ~ 30 미만	460	1,200	900	600
30 이상 ~ 40 미만	440	1,150	850	550
40 이상 ~ 50 미만	420	1,100	800	500
50 이상 ~ 60 미만	400	1,000	750	450
60 이상 ~ 70 미만	380	950	700	400
70 이상 ~ 80 미만	330	600	510	350
80 이상 ~ 90 미만	300	500	440	320

[별표 4]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요건(제19조의3 관련)

용도 지역	건축물의 용도	거리	기존개발 행위면적	기반시설 등
1. 계획 관리 지역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영 별표 20 제1호 자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공장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m 이내 (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40,000㎡ 이상	가. 집단화유도 지역과 연결 도로: 너비 15m 이상 나.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이 적정할 것
2. 농림 지역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50m 이내 (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35,000㎡ 이상	가. 집단화유도 지역과 연결 도로: 너비 12m 이상 나.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이 적정할 것

인천광역시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 제정이유

장기공공임대주택정책은 주택공급 이후 관리 및 입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편의시설 등에는 지원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에게 복지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의 기본방향을 주거복지 실현, 임차인 대표회의 운영 활성화 등으로 정함(제3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제4조)
- 시장은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개선 사업 등의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여야 함(제6조)
- 시장이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및 복지서비스시설 확충 등의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제7조 및 제8조)
- 사업비 재원 근거를 마련(제9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2월 20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093 호

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군·구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

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 군·구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2.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는 국가·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3. “복지서비스시설”이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이 조례에 따른 사업 및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복지의 실현
2. 임차인 대표회의 운영 활성화
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자활 증진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임차인 대표회의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입주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2.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주거복지증진 사업지원) 시장은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각 호의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
2.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개선 사업
3. 노약자·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증진 사업
4. 노후시설의 보수 및 개선사업 등
5.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

제7조(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시장은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각호의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
3. 입주자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제8조(복지서비스시설 확충)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서비스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 등 복지서비스시설의 기반과 여건을 조성한다.

제9조(사업비 재원) 시장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 칙

인천광역시규칙(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이유

상위 조례인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설치조례」가 2018. 10. 8.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조례에 맞게 이 규칙의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명을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
- 개정된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운영에 관한 조례」에 납부고지서 서식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항 및 별지 서식을 삭제
-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등 다른 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 번호 등 인용조문을 수정(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2월 20일

인천광역시규칙 제 3101 호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중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별지 제37호서식”을 “별지 제40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수납부의 작성등)”을 “(수납부 등 대장 작성·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별지 제8호서식의 의하여 수납부를 작성하여야 한다.”를 “제4조에 따라 수납부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지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규칙(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저장·보유·가공·제공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현행 규칙의 관련 서식을 삭제하는 등 기존 규칙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자원봉사활동실적이 행정안전부의 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삭제 (제8조, 현행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삭제)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2월 20일

인천광역시규칙 제 3102 호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의한”을 “따라”로, “센터장 1인, 사무국장 1인과”를 “센터장과 사무국장 각 1명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 인증칭호 부여 등)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과 군·구자원봉사센터(이하 “군·구센터”라 한다)의 추천을 통하여 자원봉사 활동 인증칭호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제7조 관련)

[illegible]

인천광역시규칙(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이유

-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을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의 기준에 따라 본청, 그 밖의 관서 및 제1관서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 까지로 정함에 따라 이를 규칙에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회계관계공무원을 본청, 그 밖의 관서 및 제1관서로 구분하여 지정(제2조)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명시(제4조)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2월 20일

인천광역시규칙 제 3103 호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및 그 밖의 관서

가. 징수관·재무관: 수도권매립지 업무담당 실·국장

나.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수도권매립지 업무담당 부서장

다. 지출원·수입금출납원: 수도권매립지 업무담당

2. 제1관서

가. 재무관: 제1관서의 장(「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별표 1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나. 분임재무관: 제1관서 회계담당 부서장

다. 지출원: 제1관서의 회계담당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존속기한)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 - 19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2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항만중요시설물 보호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을 강화하여 항만지구의 열악한 주변 환경 및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건축 제한 제외 시설 중 도시형공장을 삭제(안 제58조 제2항 제3호 타목)
- 나. 시설 제한을 1~3종에서 1~5종으로 확대(안 제58조 제2항 제3호 타목2)
- 다.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경우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의 건축 허용(안 제58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45, 팩스 032-440-8766, 이메일: budu7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라. 규제심사: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항제3호타목 중 “도시형공장, 기존공장”을 “기존공장”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3종”을 “5종”으로 한다.

제58조제3항 중 “제2항제1호”를 “제2항”으로,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또는 교정·군사중요시설물보호지구”를 “보호지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형공장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 설치된 도시형공장에 대해서는 제58조제2항제3호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계법령에 따라 공장설립승인 및 건축허가를 신청한 도시형공장에 대해서는 제58조제2항제3호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8조(보호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① (생략)	제58조(보호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	3. -----
가. ~ 카. (생략)	가. ~ 카. (현행과 같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조선 및 선박관련 제조·수리시설, 수산물 가공·제조시설, 도시형공장, 기존공장의 증축·개축은 제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타. ----- ----- ----- -----, <u>기존공장</u>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 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2) ----- ----- ----- ----- ----- 5종----- -----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파. ~ 버. (생략)	파. ~ 버. (현행과 같음)

4.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가 역사문화환경보
호지구 또는 교정·군사중요시설
물보호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
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
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해당 도
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
물 및 시설의 경우에는 건축할 수
있다.

④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 제2항-----
----- 보호지구-----

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input type="checkbox"/>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6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input type="checkbox"/>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28조(도시형공장) <input type="checkbox"/>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input type="checkbox"/> 「대기환경보전 법률 시행령」 ○ 제39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 제2항 별표 10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7.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8.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9.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의 방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공업지역·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이 경우 제31조제3항에 따라 공항시설에 관한 보호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항시설을 보호하고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에 관한 건축제한을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3. 생태계보호지구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도시형공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2.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으로서 제1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만 해당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

[별표 10] <개정 2018. 1. 16.>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제39조제2항 관련)

구 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1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2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3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4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된 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5종사업장(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 비고 : 1. 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 중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 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2. 1종사업장과 2종사업장 중 1개월 동안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하여 1일 평균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기술인을 각각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 또는 환경기능사로 대체할 수 있다.
3. 공동방지시설에서 각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4. 전체 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사업장은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다.

5. 대기환경기술인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으며, 대기환경기술인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환경기술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소음·진동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6. 법 제2조 제11 호에 따른 배출시설 중 일반보일러만 설치한 사업장과 대기 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은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다.
7.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 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 도시형공장 및 오피스텔의 건축제한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 도시균형계획국 도시균형계획과장 정동석